

박지원 “야권 통합, 민의 거스르는 것”

“치열한 경쟁 통해 선택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 지지 받아 정권교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지금 야권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어긋나는 것,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의회에서 자당 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민의대로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택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정동영 전 의장도,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다 D1로부터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야권통합, 단일후보만 생각했다”며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매일 내게 전화를 해 ‘이번에는 3당제가 확실하 되니까 제발 통합 소리 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자신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어떤 정치학자도 야당이 분열해서 승리한다고 예측 못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고, 국민의당은 야당의 뿌리인 호남을 석권했고, 전국적으로 야권의 제2정당으로 발돋움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분열해서 야당이 승리한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안철수의 판단은 옳았고, 박지원의 판단은 틀렸다고 지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민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총선 민의대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10월, 11월 국민들이 어떤 후보들을 결정하려고 하는지 보고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지지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지원 비대대표, 김성식 정책위원장, 정동영 의원 및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김관영 의원, 김광수 의원, 김종희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북출신 장관 부재 심각성도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동안 호남 인사차별이 극심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26명 중 호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현 청와대안보실장을 제외하면 3년째 우리 전북에서는 장관이 한 사람도 없다. 군에서도 대장 8명 중 호남은 전무하고 울

해 군 장성 진급자 15명 중 호남은 전무하다. 검찰, 경찰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고 일침을 놨다.

박 위원장은 또 “전북 출신 차관급도 국민안전처 1명,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단 1명도 없다. 청와대 비서관 40여 명 중 전북 출신은 단 1명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인사차별을 수습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고 있

다는 양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호남 인사들은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박 대통령은 차기 개각에서 반드시 호남, 특히 전북 출신 인사를 발탁해서 이번만큼은 전북 도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이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10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광수 의원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앞서 김관영(군산)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원내 업무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도당위원장을 사임했었다.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의원은 정당대회에서 정식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김광수 위원장은 “전북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주시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신광영 기자

유성엽 의원, 정읍·고창 재난 특별교부금 9억 확보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읍·고창, 국민의당)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정읍 덕천지구(용전, 객담)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공사(5억원) 및 고창 구암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4억원)이다.

이로써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던 정읍 덕천지구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공사와 고창 구암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덕천지구 일대 보수공사가 시행되면 저수지의 수위조절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반으로 인근 주민의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주변 농가의 영농편의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암지구는 상습침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향후 정비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농로와 배수로의 혼재로 인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보행자 안전문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산경위,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도의회 산경계위원회(이학수 위원장)는 10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7개 시·군 연합회 3만여 명의 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농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다.

도내에서는 14개 시·군 2,500여 명의 농업경영인이 참석했다.

이날 이학수 위원장을 비롯한 산경계위원회 의원들은 도내 농수특산물 판매장과 홍보관, 학술행사를 둘러보고 대회에 참가한 도내 농업경영인들과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인해 농업은 이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다가 김영란법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며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도내 농업경영인들이 굳건한 의지로 전라북도의 농업·농촌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국내외 농업경영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화합을 통해 농촌의 미래를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천정배, 지지모임 ‘구국(救國) 포럼’ 결성 추진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자신의 지지모임과 싱크탱크 역할을 겸할 ‘지구구국(自救救國) 포럼’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천 전 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천 전 대표 주변에 있던 분들이 공부도 같이 하면서 뜻과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모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더민주 “누진제 개선 반대 한전, 혈세로 해외연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전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직원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전이 서민 고통을 겪어짜 돈잔치를 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자감세를 들먹이며 누진제 개선에 반대하는 한전 태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전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 외유’를 즐기고 있다”며 “남치는 돈을 주체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 열불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기 대변인은 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또 한 번 귀를 닫았다”며 “이해할 수도 공감하기도 어렵다”며 개선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뉴시스

정의당 도당,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편성 촉구

“교육부가 올해 추경 예산 776억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

정의당 전북도당은 우레탄 운동장 트랙 교체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77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 하지 않은 반증이다”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교육부는 지난 3~6월 학교 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초·중학교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 98개교를 비롯해 전

국에 1767개교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레탄 트랙 교체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전액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액 예산을 삭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전북의 경우도 도내 98개 학교 중 47개교만 이번 방학에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51개 학교는 이번

여름방학에 교체가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내의 예산 핑계게임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중금속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한 예산을 그 무엇보다 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그 예산편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추경예산안에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예산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이정현 지도부, 최고위원 발언 금지 추진 논란

당·원내 대표 발언만 공개… ‘소수 의견 막겠다는 것’ 비판 자초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10일 앞으로 공식 회의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발언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같은 방침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붕괴야 학당’을 연상시킨다는 오명을 벗어났다는 의도지만, 당내 소수 의견을 틀어막겠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 각 최고위원들이 제한 없이 말했다가 앞으로는 당 대표, 원내대표만 공개 발언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들이 말하되 가급적 의견이 있거나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조율되고 정제된 내용을 당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는 운영방식의 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최고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외에 모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며 공개 발

언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 보니 계파 관계에 따른 격론이 오가며 당 내분 상황이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됐다.

이 대표는 논란이 일자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가 말 그대로 회의이지 논평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부터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말 그대로 회의를 하기 위해, 사전에 말하자면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방침이 비박계의 목소리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내용의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제한이라는 말이 틀리다. 그 의도를 어떻게 거기까지 상상을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론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뉴시스

이정현 후보 당선, 계파 청산 이뤄질까

전대 후 더욱 깊어진 계파갈등… 대선 경선에서 내전 불가피

새누리당 새 당대표에 친박계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내 계파제인 계파 청산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현 신임 당 대표는 지난 9일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다”고 계파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다. 전대 후보자 모두 ‘계파 청산’을 내세웠지만 비박계의 ‘계파 단일화’와 김무성 전

대표의 비박계 후보 지원, ‘오너 투표’ 논란 등으로 전대는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됐다.

친박계는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싸움’하면서 위세를 과시한 만큼 당장은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역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두 차례에 걸친 단일화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당권을 빼앗긴 만큼 당장은 친박계와 각을 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

김수민 “빨리 기소할 줄 몰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0일 검찰이 자신과 박선숙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에 대해 “기소할 줄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기소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소될 때를 대비해 제 입장을 밝힐 준비는 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먼저 검찰이 어떤 식으로 기소했는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의원실을 통해 입장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같은 당 양주현(구속 기소) 전 사무부총장의 역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박선숙 의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이정현 당선에 기선제압 시도

야당은 10일 이정현 새누리당 당 대표 당선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첫날부터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만으로는 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 대표를 압박했다.

같은 당 이상호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을 택한다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도로 새누리당이 된 셈이니가 상대하기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간신문은 ‘도로친 박당’이라 대서특필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밖에서 이 대표의 당선이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주승욱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보수당 최초 호남 당대표가 나온 것은 축하할 일이고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뉴시스